

보 도 자 료

- 제 공 일 : 2005. 5. 3
- 제 공 자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 과 장 : 강 상 구
- 담당서기관 : 송 명 식
- 문 의 : (031) 467-0130

이 자료는 2005년 5월 4일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금년부터 보급종 친환경 유기종자 생산

- 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에서는 금년부터 벼 보급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하고 유기종자를 생산하는 등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화학비료와 합성화학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는 유기종자를 시범사업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 유기종자 생산 계획량 : 14톤
 - 충남 홍성 유기농단지 : 새추청 12톤
 - 전남 강진 유기농단지 : 동진1호 2톤
- 친환경종자 생산을 위해 벼 채종포장에도 겨울철에 자운영, 헤어리벳치, 호밀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푸른채종포장 가꾸기사업”을 실시하여 지력증진과 대기정화에 기여토록 함과 동시에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감축토록 하는 등 친환경 종자생산을 추진하고,

-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총채보리를 벼 채종포에 집단적으로 재배하여 축산액비를 토양에 환원하고 청예사료를 가축에게 급이 하는 자연 순환농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하여 미소독 종자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종자를 공급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국립종자관리소에서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유기종자 생산과 친환경종자 생산을 위한 푸른채종포장가꾸기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종자 생산·공급 추진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 2005. 5. 3.~5. 4.
- 장소 :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
- 참석 : 채종농가 및 종자관리소 7개지소, 지자체 3개 종자보급소 관계자

□ 앞으로 국립종자관리소에서는 친환경 유기종자 생산 공급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유기농 쌀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국립종자관리소에서는 현재 32% 수준인 벼 종자 갱신율을 2008년까지 50%로 높이기 위하여 정선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벼 보급종 18,000톤을 생산하여 갱신율 36%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5. 5. 3
- 제공자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 과 장 : 정 황 근
- 사무관 : 김 승 환
- 전 화 : 500-1810

이 자료는 2005년 5월 4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우리농업의 친환경농업 지도가 바뀐다.
= 300만평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 조성 =

□ 우리농업의 친환경농업 지도가 바뀌게 된다.

농림부는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및 현재 2.5% 수준인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010년까지 10%까지 늘리기 위해

○ 농가당 1ha미만의 소규모 친환경농업방식을 시군 또는 읍면 단위를 묶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300만평규모의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도까지 행정단위 및 수계주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를 조성한다.

○ 그동안 추진해온 소규모(10~50ha) 친환경농업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시군단위 친환경농업 실천이 시급한 지역과 새만금상류지역 등 환경민감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98~'02년까지 추진한 대규모친환경농업지구 40개소 평가결과 소득은 쌀 20%·원예 23% 증가, 농약 46%·화학비료 30% 사용량 절감 효과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논·밭·시설농업 등 경종농업의 특성과 축산을 연계해 1,000ha·500ha·100ha단위로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대·중·소 3개 기본시설모형을 설계하고 기본모형을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규모로 변형할 수 있도록 확대 또는 축소프로그램도 개발한다.

○ 아울러 대·중·소 기본시설모형의 배치방식을 지역특성과 사업효율성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분산형·집중형·혼합형 등 3개방식으로 결합하여 현실적응력이 검증된 10개 정도의 표준사업모형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이렇게 되면 300만평의 대규모단지이면서도 단지내 농업특성과 다양한 사업주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사업초기에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사업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광역단지에는 농업부산물과 축산분뇨 등을 자원화(Recycling)하여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생산시설·미생물배양시설·축산분뇨자원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화학자재 사용을 대체하게 되며,

○ 공동육묘장·친환경원예시설 및 축사시설 등 친환경경종과 친환경축산을 연계하는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집하·선별·저장·출하 등 산지 유통에 필요한 일관 유통시스템이 구축되며, 친환경교육장을 설치하여 기술교육과 광역단지홍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단지 내에 생태마을과 생태공원(Eco-park), 유기농 체험교육장 등 농촌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역단지의 생산 활동이 어메니티(amenity)와 결합하여 도농교류의 촉진과 도시민들이 농촌체험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성된다.
- 광역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등에 대한 주체별 운영프로그램과 표준사업모형의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특히 유통시장의 대형화와 온라인화 등 시장변화에 대응할 광역단지 브랜드화전략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주도하는 농협·대형유통업체 및 전문매장 등 각종 유통채널과 광역단지와 연계유통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게 된다.

□ 금년에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희망지역을 신청 받아
농업환경 기초조사와 광역단지에 설치할 생산·유통시설
등의 기본설계를 이끄는 영농구조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표준사업사업모형을 개발한 후,

○ 사업여건이 잘 갖추어진 사업후보단지를 평가하여 2006년도
에는 3개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 2007년도부터는 시범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6~7개소씩,
2013년도까지는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나가되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공격적인 유기농·수출농업전략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향후 「1시군 1광역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관광·수출농업단지로 한국농업의 체질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 사업대상자의 선정은 사업희망 시군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사전에 사업추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희망지역 신청
→사업후보단지 선정→사업대상단지 선정」 등 3단계로 이루어진다.

○ 금년 5월 중에 전국 시군 사업희망지역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사표와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2006년부터 2013년도까
지의 연도별 사업후보단지를 선정하고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매년 당해연도 연도별 사업 후보단지를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대상단지를 선정한다.

□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학계·연구계 전문가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추진단(단장 :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을 구성하여 기초조사와 사업모형을 개발해 2006년부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가고,

○ 사업추진단의 자문과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광역단지 컨설팅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분야의 농촌진흥청 전문가와 경종·축산·유통분야 신지식농업인, 도·시군 등 지방행정 기관 담당관, 친환경농업단체 및 농협관계자 등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사업모형설계와 향후 사업추진 시에 반영한다.

□ 농림부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전국 시군에 조성되면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관행농업구조가 본격적으로 친환경 농업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히고,

○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규모의 유기농·관광·수출농업단지가 조성되어 한국농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도참고자료

- 제공일 : 2005. 5. 3.
- 제공자 :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
- 과 장 : 백 종 호
- 사무관 : 김 중 윤
- 전 화 : 031-446-1926

이 자료는 2005년 5월 4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만의 한국산 사과, 배 등 생과실 수입금지에고조치에 적극 대응

-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안광욱)는 대만이 올해 3월 초 복숭아 심식나방을 금지해충으로 추가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복숭아심식나방이 분포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사과, 배, 복숭아 등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하는 『대만 수입동식물제품 검역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 10일까지 관련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에 따라,
- 대만측에 현재까지 대만으로 수출된 한국산 과실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바 없음을 지적하고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은 과실만을 대만에 수출하기 위한 우리측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만이 '05. 3. 3일자로 복숭아심식나방을 금지해충으로 추가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복숭아심식나방이 분포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사과, 배, 복숭아 등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하는 『대만 수입동식물제품 검역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관련국들은 자국산 과실을 통해 복숭아심식나방이 대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유입차단을 위한 관리방안을 대만측과 협의하여야 함
- 국립식물검역소는 대만측에 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에서 현재까지 수입검사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한국대북대표부와 주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지적하는 한편,

- 수출업체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는 과실만을 대만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측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만 식물검역관계당국에 제사('05. 4. 22.)한 바 있음
- 국립식물검역소는 앞으로도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산 사과, 배, 복숭아의 대만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만측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검역전문가를 대만현지에 직접 파견하여 우리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숭아심식나방 이란?

- 복숭아심식나방은 한국 · 일본 · 러시아 · 중국에 분포하고 있는 나방류임
-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여 복숭아 · 사과 · 배 등의 과일 표면에 산란하고 있으며, 애벌레(위충)가 과육 속으로 침투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임

본 자료는 2005.5.5(목)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산업정책과
담당자	강남훈 과장 김종철 서기관
전화번호	2110-5113

KOTIS나우누리 : go mocie, 천리안하이텔 : go allim, 인터넷 : www.mocie.go.kr

李산자, 젊은 기업인재들과 경쟁력 Upgrade방안을 토론

- 50개 기업의 과장급 직원들,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평소 아이디어를 쏟아내 -

□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은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산자부장관과 젊은 기업인재들과의 대화』에 참석, 우리경제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임

※ 『산업자원부 장관과 젊은 기업인재들과의 대화』

* 일시/장소 : '05.5.4(수) 10:00~13:10,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여의도)

* 개최배경 : 李 장관이 경쟁력 강화와 혁신의 확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 우리경제 전반의 현안에 관해 평소 만나기 쉽지 않은 기업의 젊은 인재들(30대중반·40대 초반 : 3040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함

* 도시락 오찬 및 기업사랑 스티커 부착 행사 포함

※ 행사개요 : 별첨 1 참조

□ 이날 회의에서 기업 직원들은 李장관에게 환율, 유가,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대응책, 중소기업 육성대책 등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李장관은 해박한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전개함

□ **李장관은 답변을 통해**

- ① 그간 정부·기업의 노력으로 우리경제는 지난해 GDP 세계 10위(6,801억불), 수출 세계 12위(2,538억불)로 경제적 위상이 급성장했으며, 곧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
-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 고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하락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우리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산업발전의 등대(guiding light)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선진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발전 그랜드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선진산업강국으로의 발전전략』에 담길 주요내용은 ▲ 대내외 환경 및 산업패러다임의 변화, ▲ 우리산업의 현좌표와 평가, ▲ 2015년 산업비전과 산업발전 전략, ▲ 수소경제대두 등 에너지·환경이슈의 대응전략, ▲ FTA 가속화에 따른 선진형 통상국가 전략, ▲ 부문별 양극화를 치유하는 동반성장 전략, ▲ 지식·공공서비스의 산업화 ▲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 등임

※ 선진산업강국으로의 발전전략 개요 : 별첨2 참조

- 특히,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잇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 발전의 전략을 이미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EU는 '90년대 이후 신경제(New Economy)를 통해 경제적 성과가 크게 제고된 미국을 다시 추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李 장관은

②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혁신주도형 경제로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혁신이 기본이 된다는, '05.9월초 3일간 범국가적인 「경쟁력의 날」 행사를 통해 ▲ 우리산업의 경쟁력(Competitiveness)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 우리경제의 발전단계에 걸맞는 제도, 정책, 생산요소 등 경쟁력 구성요소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첫날인 「경쟁력의 날」에는 그간 준비한 산업발전 그랜드 비전을 국내외 석학, 기업인, 학계,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선진산업발전전략 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 2일차·3일차에는 최근 경쟁력과 혁신의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Cluster)」와 「인적자원개발」 국제회의를 메인행사로 개최하는 한편,
- 아울러 환경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속가능 산업 발전 국제회의」와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국가생산성 혁신대회」를 병행하여 개최할 것이라고 말함

※ 경쟁력의 날 행사 추진계획 : 별첨 3 참고

□ 아울러, 李 장관은

③ “열심히 일하는 기업과 기업인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가 선진산업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 경제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업사랑협의회』를 통해
 - ▲ 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조례로 제정하는 선도적인 지자체들의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 존경받는 기업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들의 이름을 딴 도로·건물·다리 명명을 추진하고, ▲ 학생·교사·학부모·일반인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경제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 반기업·반시장적인 교과서 내용을 지속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힘

□ 한편, **李 장관**은

- ④ 우리경제의 최대 당면과제인 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 “토요타와 협력업체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로 구성된 네트워크”간의 경쟁을 예로 들며, 세계는 개별기업간의 경쟁체제에서 기업네트워크간의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들이 주변의 수급기업들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Network)를 구축하여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최고경영자 외에 기업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기업인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함

□ 李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업사랑협의회가 제작한 기업사랑 스티커 부착 행사에 참가하여 “기업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참석자들과 함께 본인의 차량에 붙이는 행사를 가지면서, 앞으로 「기업 기(氣) 살리기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음

【별첨1】 행사개요 및 참석자 분석(직급별·연령별·성별)

【별첨2】 「선진산업강국으로의 발전전략」 수립계획

【참고1】 주요선진국의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별첨3】 「경쟁력 주간 행사 추진계획」

【별첨 1】

『산업자원부 장관과 젊은 기업인재들과의 대화』 행사개요

□ 추진배경

- 주 장관은 그간 업계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최고경영자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청취
- 이번 간담회는 평소 만나기 쉽지 않은 실제 기업일선에서 활동하는 젊은 인재들이 느끼는 우리경제의 문제점과 혁신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이를 산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

□ 행사개요

- 주 최 : 산업자원부, 기업사랑협의회
- 주 관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 일 시 : 5. 4(수) 10:00~13:10
* 오찬(도시락) 및 기업사랑스티커 부착행사 포함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2층)

□ 참석대상(68명)

- 산자부 : 장관, 차관보, 중기청·특허청 차장, 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과장 등
- 업 계 : (대기업 30·40대) 25명, (중소기업 30·40대) 26명
- 기업사랑협의회 :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산업연구원장, YMCA 국장
* 전경련(하동만), 대한상의(김상열), 무역협회(이석영), 경총(김영배), 중기중앙회(장지종), YMCA(송진호)

□ 토론주제

- ① 선진산업강국건설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
- ③ 산업자원부에 대한 제언

□ 참석대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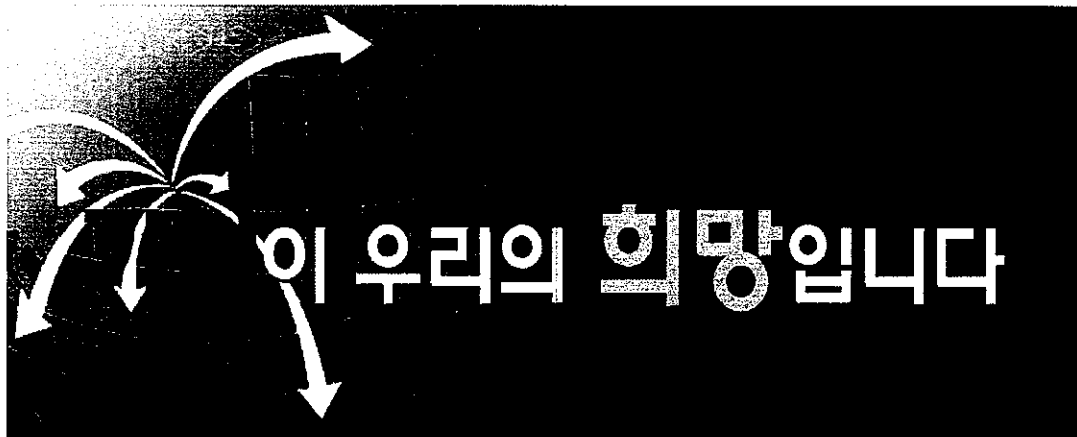
- ① 업종의 경우 전체 51개 업체 중 제조업이 44개(대 21, 중소 23)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물류·웹서비스 지원 등 서비스업이 7개(대 4, 중소 3)로 14%를 점유
- ② 연령, 경력에 있어서는 대·중소 공히 근무경력 15년 이내의 30대 후반 ~ 40대 초반의 젊은 세대가 75%(대 68%, 중소 81%)로 대다수
- ③ 직위는 과장·부장 등 중간 간부급이 75% 이상(중소기업의 경우 7명(13%) 정도가 이사급 이상)
- ④ 현 근무부서의 경우 기획·총무 등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33명으로 65% 차지, 나머지는 영업 등 사업부서에서 근무

구 분	대기업(25개)	중소·벤처기업(26개)
①업종(개)	전자 3, 자동차, 3, 철강 3, 화학 3, 식음료 3, 유통물류 4 등	기계부품 11, 플라스틱 4, 웹서비스 3, 건축분야 3 등
②경력(명)	10년이내 6, 10~15년 11, 15~20년 3, 20년이상 5	10년이내 10, 10~15년 11, 15~20년 2, 20년이상 3
③직위(명)	전원이 과장, 부장등 중간간부	중간간부 20, 이사 등 고위직 6
④부서(명)	관리부서 19, 사업부서 6	관리부서 13, 사업부서 13

□ 기업사랑 스티커 부착행사

- 취지 :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낮게 평가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 氣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 참석자 : 장관, 기업사랑협의회(경제단체 부회장, YMCA 국장), 직원대표

< 스티커 예시 >



 기업사랑협의회

【별첨 2】

『선진산업강국으로의 발전전략』 수립계획

1. 목적 및 배경

- 우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전략의 수립 및 혁신주도형 산업 전략의 민·관 확산
- 최근 우리경제가 처한 대내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
 - BRICs의 급속한 부상에 따른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 수소경제 대두 등 에너지·환경이슈의 현실화
 - FTA체결 가속화와 선진통상국가 요구
- “선진경제”, “선진한국”을 산업발전으로 선도
 - 부문간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전략 추진
 - 지식기반서비스의 산업화 측면에서의 발전전략 수립

2. 발전전략의 주요내용

① 대내외 환경 및 산업패러다임의 변화

- 세계화, IT·NT 등 신기술의 대두, 중국의 급부상, 환경과 시장의 조화
- 수소경제의 대두, 교토의정서의 발효, FTA 체결확대와 선진형 통상국가의 대두

② 한국산업의 현 좌표와 평가 (성과/문제점)

-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질적 성장 취약, 산업인력 부족, 국가기술 혁신체제 취약,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미흡, 제조업 성장을 지원할 서비스업 성장 미흡
- 부문별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의 정책실효성 저하 및 활력제고

③ 2015년 산업비전과 발전전략

-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 3대 산업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진

④ 중점 추진과제

-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 혁신주도형 기술인력 양성, 국가표준 인프라 구축, 지역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선순환 구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수소경제 도래에 따른 산업화 전략, 선진통상국가 및 선진경제 시스템 구축, 부분별 동반성장전략,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⑤ 산업별 발전전략

- 주력기간산업,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3개 산업군으로 구분
 - 산업별 동향, 경쟁력 분석 및 발전가능성, 비전·발전전략·정책 과제 도출
- *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섬유패션, 석유화학, 철강, 기계, 부품소재, 디지털 가전, 전자의료기기, 바이오 산업, 환경산업, 항공, 비즈니스서비스, e비즈니스, 유통산업, 물류산업

3. 관련행사 계획

- '05.9월초 “경쟁력 주간” 중 보고대회 개최

【참고 1】

주요선진국의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1. 주요 선진국의 동향

-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잇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
- 이들 국가들의 발전비전과 전략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기술 혁신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 ①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선두자리를 확보하고,
 - ② 내부적으로 성장과 고용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특히, 일본과 EU는 '90년대 후반 신경제(New Economy) 이후 경제적 성과가 크게 제고된 미국을 다시 추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구체화

< 주요국가의 산업발전 비전 수립사례 >

- ◆ 美 : "Strategic Plan 2004-2009" (DOC, '04)
"Manufacturing in America" (DOC, '04)
- ◆ 日 : 일본 21세기 비전(내각부, '05)
신산업 창조전략(경산성, '04)
- ◆ EU : Lisbon Goal(EC, '00)
Barcelona Objective(EC, '02)
Manufuture* : A Vision for 2020 (EC, '04)
- ◆ 영국 : Manufacturing Strategy(영국 DTI, '02/'04)

* 제조업(manufacture)의 "manu"와 미래(future)의 합성어

2. 각국 발전전략의 주요내용

가. 미국 (Strategic Plan 2004-2009 및 "Manufacturing in America" : DOC, '04)

□ 『민간부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세계경제에서의 주도적 역할 지속 (비전)』 하에 다음 정책목표를 제시

- 경쟁력 극대화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보/수단 제공
-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표준화를 통한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 주요 정책과제

- 낙후/소외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기술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및 공공투자의 증대
-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비용 절감 정책 및 제조업 투자에 매력적인 경제여건 조성
- 교육 시스템의 개선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화

나. 일본 (신산업 창조전략 : 경산성, '04)

□ 신산업분야 관련 유망시장의 개척·재편을 포함한 업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3대 선순환구조 형성전략을 채택

- 개별기업이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하여 채산성이 낮은 부문의 정리 및 핵심사업과 관련한 신사업 투자 활성화 (미시적 선순환구조 형성)
- 산업구조 전체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의 부활과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서비스업을 만드는 역동적인 산업구조로 전환 (준거시적 선순환구조 형성)
- '혁신과 수요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내수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모색 (거시적 선순환구조 형성)

□ 3대 주요 산업군별 액션 프로그램 제시

- * 첨단적 신산업군 : 연료전지, 로봇(산업용 및 가정용), 정보가전
- * 니즈대응 신산업군 : 건강복지기기 · 서비스, 환경 · 에너지기기 · 서비스, 콘텐츠(각종 응용 소프트웨어 포함),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 * 지역재생 산업군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상품 제조업의 신사업, 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다. EU (Manufuture : A Vision for 2020, '04),

□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필수라는 인식하에 European Commission은 유럽차원에서 제조업의 발전비전과 전략을 제시

- 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
- 세계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집약적 제조업에서 지식집약적 혁신 제조업으로의 전환 필수

□ 주요 과제

-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 (혁신의 촉진)
- 지속가능경제의 차원에서 과학과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시 윤리, 건강, 안전문제를 더욱 고려할 필요성 대두. 반면에 상기문제에 대한 지나친 고려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유념 (사회문제의 해결)
- 학계와 산업계간의 긴밀한 공동협력을 통하여 지식창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효율적 지식이전을 촉진 (지식창출의 촉진)
-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산업계의 니즈에 맞게 개편 (교육과 훈련체제의 개선)

3. 시사점

- ① “정부의 역할”을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여건조성이라고 표방하고 있으나
 - 제조업에 대한 투자촉진 및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자원배분을 수행
- ②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제조업의 역할,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
- ③ 발전전략의 핵심은 산업기술 및 혁신정책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성장과 고용확대를 강조
 - 국가전체, 지역별, 부문별 지원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

【별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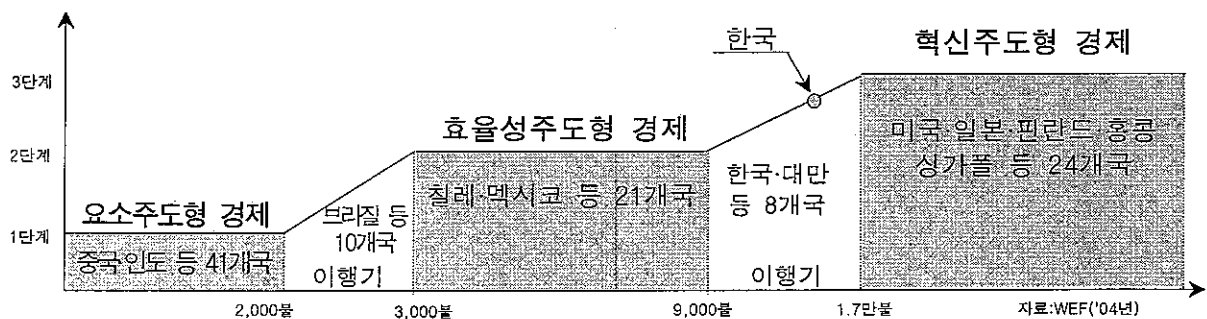
『경쟁력의 날 및 경쟁력 주간』 행사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최근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이 5%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어 10년간 국민소득 1만불에 정체

* GDP성장률(%) : ('01) 3.8 → ('02) 7.0 → ('03) 3.1 → ('04) 4.7 → ('05추정) 4.0

- 경제발전단계도 효율성 경제에 머물러 있어 선진경제인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도 미흡한 상황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도 정체상태이거나 크게 하락

* IMD(총60국) : ('00) 29위 → ('01) 29위 → ('02) 29위 → ('03) 37위 → ('04) 35위

* WEF(총104국) : ('02) 26위 → ('03) 18위 → ('04) 29위

- 국민소득 2만불 달성,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모멘텀 제고를 위해 경쟁력 강화시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

* 경쟁력(Competitiveness)이란 한 국가의 생산성(Productivity)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정책·생산요소의 집합을 의미(WEF)

- 미국·EU 등 선진국들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Growth & Job)의 근원을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범국가적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

* 미국은 '86년 민간주도로, EU는 '02년 정부중심으로 「경쟁력위원회」 설치

- 특히 미국보다 늦게 출발한 EU는 「경쟁력의 날」 행사('03년부터 매년 개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음

2. 동 행사의 의미

- 국민소득 2만불을 돌파하고, 3만불을 향해 매진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Growth & Job)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세계적 추세에 동참

* 최근 EU는 EU 집행위 산업담당 위원의 부원장 격상, 경쟁력위원회 및 경쟁력 장관 역할 강화, 경쟁력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성장·고용, 사회통합, 친환경 중 성장·고용에 정책 우선순위 부여

- 민·관합동으로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쟁력 관련 이슈를 종합논의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 확립

- 미국, EU 등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경쟁력 강화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을 통해 달성

- 혁신, 인적자원개발, 클러스터 등을 확산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경제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경쟁력 위상 확보

- 관련 행사를 통합·집중하여 경쟁력의 날 및 경쟁력 주간에 배치하여 경쟁력 평가 및 전략을 논의하고 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단편적·일회성 행사는 자체 행사주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이슈화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통합·집중

3. 경쟁력 주간 행사 주요내용

- 첫날인 경쟁력의 날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경쟁력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선진산업발전전략 보고대회」로 시작

* 일반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참여제고를 위해 「국가경쟁력혁신 박람회」를 경쟁력 주간 3일간 개최

- 최근 경쟁력과 혁신의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Cluster)」와 「인적자원개발」 국제회의를 메인행사로 2·3일차에 각각 배치

* 클러스터(Cluster) : 관련 기업·대학·연구소·정부기관이 집적된 지역을 의미

- 환경과 개발의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속가능 산업발전 국제회의」를 2일차에 개최

- 경쟁력 강화의 기반인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국가생산성 혁신대회」도 병행

< 경쟁력 주간 행사일정 : 총8개 행사 >

구 분	9.6(화) 경쟁력의 날			9.7(수)			9.8(목)		
09:00~09:30	등록			등록	등록		등록		
10:00~11:00	산업발전 전략 보고대회	경쟁력 박람회	지속가능 산업발전 컨퍼런스	클러스터 국제회의	경쟁력 박람회	인적자원 개발 국제 심포지엄	국가생산성 혁신대회	경쟁력 박람회	
12:00~12:30	오찬		오찬	오찬		오찬	오찬		
14:00~15:00	국가경쟁력 국제세미나		지속가능 산업발전 컨퍼런스	클러스터 국제회의		인적자원 개발 국제 심포지엄	생산성 혁신 세미나		
16:00~17:0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8:00~18:30	만찬			만찬		만찬			
19:00~									

5월4일(수) 조간용 입니다.

보도자료

(총 6쪽)



작 성 과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작 성 자	비정규직대책과 유한봉사무관
전화번호	유한봉 사무관(503-9719)

전자, 전기업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점검결과

- 노동부는 '04. 12월부터 '05년 3월까지 근로자 500인 이상 전자, 전기업종 원도급 52개사 및 사내하도급 176개사 등 228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근로조건, 복지후생, 산업재해 실태를 점검
 - 12개사(원청 3개사, 하청9개사) 153명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127개사에서 24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하였음
 - 하도급업체의 임금수준(2년차 기준)은 원청대비 72.2%, 산업재해율은 0.27% (원청은 0.09%)이며 학자금, 주택자금융자 등 복지후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 복지시설은 대부분 공동 이용하고, 4대 사회보험에 거의 가입하고 있는 등 차별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
 - ※ 불법파견 개선과 복지시설 이용의 차별완화, 사회보험 가입을 증가 등은 사내하도급 점검과 홍보 등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개선 의식을 반영
 - 법위반사항은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법위반사항을 예방해 나갈 계획
 - ※ '04년도중 677개사를 점검하여 불법파견 266개사 확인 : 직접채용 32(870명), 고발 167, 도급·파견전환 11, 기타 시정중 56)

1. 점검개요

□ 목 적

-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및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후생, 산업재해 발생 실태를 점검하여
- 하청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원·하청업체 근로자간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

□ 점검방법

- 점검기간 : 2004. 12. 1 ~ 2005. 3.31(4개월)
- 점검방법 : 부산청등 22개 관서, 46개팀 194명 점검
- 점검대상 : 228개사(원청업체 52개사, 하청업체 176개사)

2. 점검결과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불법파견은 12개사(원청 3개사, 하청 9개사) 153명 확인
- ※ 조선업 2개사(12명), 철강·화학 11개사(422명) 불법파견 확인

○ 불법파견 유형

- 파견근로가 제한된 직접생산공정에서 원청관리자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감독, 불량 등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등 노무관리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와,
- 하청업체 근로자의 년차수당, 퇴직금을 원청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 등

■ 원도급업체는 생산의 자동화 등을 통해 주요 생산공정은 원청에서 대부분 직접 관리하고 있고 불법파견 자체 점검팀 구성 및 외부 진단의뢰 등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

■ 사내하도급업체는 일부 가전제품 생산공정에서 조립 등을 제외하고 포장 등 주변업무와 기계설비 관리, 수리 등 간접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불법파견의 사례가 많지 않음

나. 근로기준법 위반

○ 하도급업체 127개사에서 24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64개사(150건) 시정완료, 63개사(95건) 시정중

※ 위반사항 : ▲근로조건 미명시(24조) 36건 ▲금품청산(36조) 32건
▲임금지불(42조) 20건 ▲근로시간(55조) 5건 ▲휴가·휴일(53조등) 14건
▲기타 취업규칙 부적절 및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126건

※ 조선 96개사(356건), 철강 38개사(88건), 화학 48개사(102건)

■ 점검대상 176개업체중 127개 업체가 법위반(72%)으로 사내하도급업체
의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금품관련 위반사항은 평균임금 산정, 법정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경우와,
- 취업규칙 부적절 및 미제출,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이 주위반 내용

다. 임금 근로조건, 산업재해, 복지후생 실태 등

□ 임금수준

〈근속 2년차 근로자 기준〉

○ 하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원도급업체에 대비하여 급여
총액 72.2%, 고정급여 72.7%, 초과수당은 86.9% 수준

※ 급여총액 기준 : 조선 83.8%, 철강 81.7%, 화학 68.9%

※ 고정급여 기준 : 조선 77.4%, 철강 84.3%, 화학 68.8%

※ 초과수당 기준 : 조선 114.1%, 철강 113.4%, 화학 98.5%

(단위 : 천원, %)

구 분		년급여총액	고정급여	초과수당	특별급여
전자, 전기 업종	원청업체(A)	24,545	18,640	3,989	1,916
	하청업체(B)	17,714	13,560	3,467	687
	비율(B/A)	72.2	72.7	86.9	35.9

▶ '0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액(2년차) 기준

▶ 고정급여는 초과수당(연장·휴일)을 제외한 통상적 임금

〈2년차 소속부서 전체근로자 기준〉

- 급여총액은 원도급업체 대비 65.0%이고, 고정급여는 65.2%, 초과수당은 78.1% 수준임

※ 급여총액 기준 : 철강 62.7%, 화학 50.9%

※ 초과수당 기준 : 철강 89.5%, 화학 61.4%

(단위 : 천원, %)

구 분		년급여총액	고정급여	초과수당	특별급여
전자, 전기 업종	원청업체(A)	28,710	21,808	4,652	2,250
	하청업체(B)	18,648	14,229	3,631	788
	비 율(B/A)	65.0	65.2	78.1	35.0

- ▶ 하도급근로자의 월 평균임금(1,554천원)은 전산업 근로자 평균임금의 73.1%이며, 제조업 근로자의 77% 수준

※ 전산업 근로자 기준 : 철강 88%, 화학 69%

※ 제조업 근로자 기준 : 철강 93%, 화학 73%

〈매월 노동통계자료('03) : 전산업(5인이상) 월 2,127천원, 제조업 2,017천원〉

- ▶ 제조업 비정규직(월 1,040천원)에 비해 높은 수준('03.8월 경찰인구부가조사 자료)

□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속년수 등

- 근로시간은 거의 같으나 휴일·휴가 및 근속년수 등은 격차가 큼

(단위 : 시간, 일, 년)

구 분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일·휴가(약정)	근속년수
전자, 전기 업종	원청업체(A)	218	34	25	8년 6월
	하청업체(B)	218	33	20	2년 9월
	비 율(B/A)	100.0	97.1	80.0	32.4

※ 총근로시간(하청/원청) : 조선 102.2%, 철강 107.0%, 화학 106.9%

※ 근속년수(하청/원청) : 조선 1년8월/ 11년7월, 철강 5년2월/ 15년7월,
화학 3년1월/ 11년5월

□ 산업재해 발생

- 산업재해율은 원도급 0.09% 대비 하도급업체 0.27%, 사망 만인율은 0.56% (원청 0.65%)임
- 하도급업체의 재해율이 높은것은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유해·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전국 평균재해율(0.85%), 제조업 평균재해율(1.28%)

□ 복지후생

- 원·하도급업체간 학자금, 주택자금융자, 장기근속자 포상 등은 비용부담 관련 복지격차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 사회보험 가입은 원·하도급 대부분이 가입하고, 복지후생시설도 거의 대부분이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붙임 『원·하청업체간 복지실태 비교』 참조】

- 전자, 전기업종의 원·하청업체간 복지실태는 이미 조선, 철강·화학업종의 경우와 같이 격차가 있으며
- 4대 사회보험 가입율 증가(100%수준), 복지시설 공동이용 등의 현상은 점검에 따른 사업주의 차별개선 의식변화를 반영

3. 향후 조치계획

-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 입건 등 사법처리
-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점검 결과를 원·하도급 근로자간 과다한 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
- 원·하도급간 산업재해 격차완화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 지도 강화

【붙임】

완하청업체간 복지실태 비교(전자전기)

구 분	원 청(52개사)	하 청(176개사)
학 자 금	○ 50개사 지원(96%) · 중고생 : 전액 지원 · 대학생 : 대부 ~ 전액 지원 ※ 업체별 차등지급	○ 29개사 지원(16%) · 중고생 : 29개사 지원 · 대학생 : 대부~전액 지원(23개사) ※ 업체별 차등지급
하계휴가비 및 명절(설, 추석) 귀향여비	○ 하계휴가비 : 6개사 지원(12%) · 200천원~400천원 지급 ○ 귀향여비 : 11개사 지급(21%) · 30천원~기본급 100% 수준지급 · 선물, 귀향버스 지원	○ 하계휴가비 : 24개사 지원(14%) · 60천원~기본급 50% 수준지급 ○ 귀향여비 : 44개사 지급(25%) · 100천원~기본급 100% 수준지급 · 선물, 귀향버스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융자)	○ 34개사 구입, 전세금 지원(65%) · 5백만원 ~ 50백만원 융자 · 무이자, 이자율은 업체별 차등	○ 13개사 구입, 전세금 지원(7%) · 5백만원 ~ 50백만원 융자 · 이자율은 업체별 차등
장기근속자 포상	○ 47개사 포상(90%) · 근속기간 5년~30년 포상 · 업체별 순금 2돈~금 20돈 · 휴가비 20만원~300만원 · 휴가 실시 3일~15일, 해외여행 등	○ 24개사 포상(14%) · 근속기간 5년~30년 포상 · 업체별 금1돈~10돈, · 휴가비 5만원~21만원 · 기타 특별휴가 등
연금·보험· 의료비 등 지원	○ 31개사 지원(60%) · 연금: 개인부담 50%이내 지원(24개사) · 의료비: 10만원~전액지원(10개사) · 단체상해보험등 : 8개사	○ 27개사 지원(15%, 중복2개사) · 연금: 개인부담 50이내 지원(11개사) · 의료비 : 부담 50%이내 지원(7개사) · 단체상해보험등 : 11개사
사내복지기금	○ 27개사중 운영(52%) · 기금 2억원 ~ 1,834억원 운영	○ 7개사 운영(4%) · 2.7억원 ~ 26억원 · 원청기준 4개사
복지후생시설 이용	○ 대부분 시설 공동이용 (휴게실, 통근버스, 목욕탕 등) · 11개사 각각 사용	○ 대부분 공동이용 · 휴게실 각각 사용(원청기준 7개사) · 통근버스 별도사용(원청기준 5개사)
사회보험 가입	○ 가 입	○ 가 입